

#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600억 투입”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문화비 등 소득공제율 10%p ↑  
일본 비롯 22곳 여행허가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

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

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숙박비 지원 등으로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활력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고 결제 편의도 제고한다.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올해 방문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문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 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 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  
정치개혁2050의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이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법정시한을 12일 남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굴욕외교 대가가 대국민 치욕”

일본 교과서 왜곡 파상공세  
“조공 바치고 뺨 맞은 것”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두고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역사 교과서 왜곡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무능 대처로 열령똥방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역사를 팔아가

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천불이 날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정희·전두환보다 더 폭압적이고, 이명박보다 더 탐욕적이고,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나라를 팔아먹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유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반포고 학폭 전학조치 삭제 정순신 아들 유일”

서동용, 정순신 의혹 추가 제기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사진)은 29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서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 삭제 건은 정군의 경우를 포함해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호 조치(전학)를 삭제한 경우는 정순신 전 감사의 자녀가 유일했다.  
반포고는 지난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등 최근 5년간 총 세 차례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순신 전 감사의 자녀가 학폭 조치 삭제를 받은 것은 2019학년 도로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

에 해당하는 8호조치(전학)삭제는 이때가 유일해 이례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군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반포고의 결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이뤄졌는지, 그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대하는 정 전 감사의 태도는 자녀를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한 시간 끌기와 핑수로 점철된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혹을 살펴봐도 정순신 전 감사는 준비한 각본 대로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며 자신 자녀의 학폭을 감싸고 돌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 윤,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교체설에 휩싸였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셈이다.  
“4월말 국민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

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민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사진)를 내정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 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